# 정부, 대북 발전소 가동 우선 지원

남북 정상회담 발표이후 각 분야별 대북지원 등 경협 확대 전망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면서 기대를 부풀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지원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현재 대북 경협확대를 위한 각 부처별 제도정비 논의를 벌이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에너지 및 사회간접자본 분야 역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수준으로 아직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확실치 않다. 다만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실정을 감안해 발전소 가동율을 높일 수 있도록 비축중인 무연탄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히고 앞으로 민간 차원의 교류가 활발해져야 대북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산자부의 남북간 에너지분야 협력은 수급 불균형에 있는 에너지 및 자원의 상호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남한기업 전용공단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의 적정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다. 검토중인 사안은 많지만 아직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사실상 없다. 이는 북한 내부 실정에 대한 좀더 세밀한 기초자료가 미흡해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점이 없지 않고, 또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이미 북한에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KEDO사업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정부 등이 지급을 보증하고 기업들이 북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국제기구에서도 보다 확실한 지원이 가능하고 기업으로서는 큰 위험없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북한진출이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대북 경제분야 협력사업자 승인기업은 경수로건설 지원사업에 나서고 있는 한국전력을 비롯, 경수로건설 통신지원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통신, 경수로 부지내 은행점포 개설에 나선 한국외환은행, 전전자교환기 등 통신설비생산의 삼성전자 등 총 39개 협력사업자가 승인을 받았다. 앞으로 전기공사업계 및 중전기기업계의 대북 진출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산자부에서는 일단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서해안 공단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대북 위탁가공교역 확대를 남북경협의 핵심분야로 활성화 시켜 나가는 한편 에너지분야 협력을 위해 힘써 나갈 방침이다.

# 산업자원부, 올 설비투자 증가율 '50%' 전망

자동차 반도체 정보통신 조선 등 주요 업종의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자원부가 제조업 및 에너지산업의 16개 업종에서 매출액 상위 1백92개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설비투자 규모(계획)는 모두 26조7천87억원으로 지난해 실적보다 23.7%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특히 제조업 부문은 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올해 설비투자액은 16조5천7백93억원으로 50%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기기 부문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151%(1천9백71억원)를 기록했으며 제지 136.9%(1천9백88억원), 조선 89.4%(4천7백31억원), 반도체·전자부품 66.2%(7조3천4백65억원), 자동차 53.9%(2조8천4백15억원) 순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철강·금속 부문은 1조5천67억원으로 작년보다 5.5% 감소했고 에너지 부문도 8조8천4백50억원으로 4.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투자재원별로는 내부자금 조달비중이 높아져 제조업의 경우 그 비중이 지난해 64.5%에서 올해는 73.2%로 확대될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지난해 수익성이 좋아 내부유보가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 산업자원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기금이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통합된다.

산업자원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입법에 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 새롭게 구성될 16대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변지역 지원사업기금이 폐지돼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기존 한전이 수행하던 공익적·정책적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신설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통합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원자력발전소나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을 자율적으로 유지할 경우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등 우대키로 했다.

개정안은 한전이 수립토록 돼 있는 각 지역별 지원사업에 대한 장기계획의 경우 당해 지역의 지역발전 계획과 연계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올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53개 발

전소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1,543억원이 지원된다.

산업자원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기금이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통합될 경우 기금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조명등 5개부문 B2B사업 확대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중인 업종별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시범사업에 조명산업을 포함시킴에 따라 조명업계에도 B2B 바람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기 선정된 가전산업외에 조명기기, 통신, 컴퓨터, 전자의료기기 등 5개 업종으로 B2B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개별업체의 조명관련 제품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표준부품정보 DB와 공개구매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또 오는 2002년부터 조명제품에 대한 정부조달을 수의계약에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전환시켜 조명산업의 B2B를 가속화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영세업체들이 난립돼 있는 국내 조명산업을 적정규모 이상의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군으로 재편한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 유통구조가 단순화되고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조명업계의 경영도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 추진배경

정부가 조명생산업체를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에 참여시킨 이유는 조명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있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다.

현재 국내 조명산업은 IMF 외환위기 이후 소규모 업체들이 난립돼 있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 저품질의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사장을 포함해 두서너명이 가내수공업 형태로 조잡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소비자들의 국산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으며 외국제품과의 경쟁에서 크게 밀리고 있다.

조명업계의 업체별 생산액은 제조업 전체 대비 30.8%에 불과한 16억4천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한 실정이다.

산자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경쟁력이 없는 상당수 영세기업들이 도산하거나 건실한 중견기업에 합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추진일정

산자부는 조명산업의 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B2B에 대한 정부시책과 추진방향 등에 대한 설명회를 조명기술연구소 4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산자부는 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B2B 지원시책과 조명산업의 전자상거래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참

여신청서를 접수받아 업체들의 제품을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조명산업의 B2B는 전자산업의 CALS/EC 사업에 포함돼 오는 11월까지 표준부품 DB와 전자입찰 및 공개구매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또 같은 기간중에 구매조달 표준문서가 개발되고 전자문서 교환 중계시스템도 마련된다.

올해말부터 내년 11월까지는 계약자 통합기술정보서비스 기반이 조성되며 A/S센터와 물류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2001년 12월에는 계약자통합기술 정보서비스가 마련돼 본격적인 기업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 문제점**

조명업계는 B2B 시범사업에 대해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표준제정과 원부자재 국산화율 제고 등 보다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조명기기 생산업체 C사의 한 관계자는 "표준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제품이 많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램프제조에 필요한 국산기술개발과 원부자재의 국산화가 보다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 산업기술개발자금 금리 인하

산업기술개발자금의 지원금리가 2.0%P정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에서 현행 8.25% 수준인 산업기반조성자금과 산업기술개발자금의 금리의 하향 조정안을 2분기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융자금중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자금 중 일부는 연리 6.0~6.5%에 지원되는데 반해 산업자원부에서 융자하는 자금은 대부분 8.25%로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또 지난해의 경우 시중금리가 크게 하락해 정부지원 융자금중 상당부분이 소진되지 않았다. 특히 섬유업체들의 경우 생산성 향상자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전체의 30%에 달한 것으로 알렸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획예산처는 2분기중 정부융자금의 지원금리를 6.0~6.5%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기술개발비로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에 대한 사후 감독도 강화될 전망이다. 종전까지는 기술개발에 대한 사후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해 비능률적으로 자금이 지원됐다. 지금까지 정부지원을 받아 개발된 기술은 약 2만2천여건에 달했지만 사업화가 추진된 것은 10%에도 못미치는 2천여건에 불과한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대출 표준심사기준 제정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때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실제로는 대출

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정부 각 부처가 운영중인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심사를 위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 각 정책자금 추천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활용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 표준심사기준은 현행 각 기관별로 이원화된 평가방식을 표준화해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였으며, 기업 경영실상을 파악해 기업 선별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표준심사기준은 추천기관의 정책자금 추천후 금융기관에서 실제 대출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추천기관의 신용검색기능을 강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또 기업규모별·자금유형별·업종별 차등화 및 비재무항목 비중을 강화했으며, 심사절차도 4단계 체크리스트 방식을 제시했다. 1단계에서는 추천기관의 부실징후 평가, 2단계에서는 신용불량정보 평가, 3단계에서는 목적적합성 평가, 4단계에서는 은행 등 여신기관의 신용상태 평가가 이뤄진다.

중기청은 이 표준안이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영실상을 적절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청은 현재 각 기관별로 적용하고 있는 심사기준이 서로 다르고 추천기관과 여신기관간에 정보공유미흡 등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이 같은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 중소기업청, 800개 업체에 해외인증 비용 70% 지원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마크가 없어 수출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정부지원을 받아 해외 유명규격 인증획득을 추진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2000년도 해외 유명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신청·접수한 2,173개 업체중 기술·품질 수준이 높은 소기업을 위주로 800개 업체를 선정해 업체당 인증 소요비용의 최고 70%(7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업체를 분석해 보면 UL(미국), CE(유럽) 등 제품인증분야 600개 업체, 품질시스템 인증(QS-9000)분야가 200개 등 총 800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이중 기초부품 및 소재류 생산업체가 488개로 나타났고, 규모별로는 50인 이하 소기업이 767개 업체로 전체 96%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10인 이하의 영세기업도 182개 업체로 집계됐다.

규격인증 마크별로는 전체 800개중 CE(유럽)가 341개, QS-9000(자동차) 200개, UL(미국) 151개, FCC(미국통신) 38개, FDA(미국식품) 13개, T(일본) 9개, VDE(독일) 9개 등 총 26개 인증 분야이며 특히 CE, QS-9000, UL 등 주요 3개 분야가 전체 86%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미처 참여하지 못한 업체 및 미 지원업체 등에 대해서도 인증획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5월중에 신청·접수를 받는 등 추가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애로해결사' 자리매김

설립 2년째를 맞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중소업체들의 수출애로 해결사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 가운데 바이어 발굴이나 해외시장 정보 제공, 수출실무 지도, 통·번역, 디자인 개선, 상담대행, 자금지원 등 수출과 관련된 애로라면 무엇이든 도와준다.

수출지원센터는 수출지원 기관간 분산된 기능을 모으고 해외시장정보 및 수출실무에 어두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98년 12월 설립됐다.

각 지방중기청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중소기업청, KOTRA, 무역협회, 수출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시중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기술연구원, 산업디자인진흥원, 산업기술정보원 등에서 인력을 파견, 운영되고 있다. 현재 15개 기관에서 90명을 파견 받아 각 지역별로 근무하고 있다. 수출지원센터의 지원대상은 최근 1년간 수출액이 300만달러 이하인 업체로 수출액이 매출액 대비 70% 이하인 업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게는 바이어 발굴, 무역거래알선,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무역금융 등 중소기업의 수출에 관한 정보제공·상담·자문 등을 지원한다. 또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무역금융, 기술, 디자인, 품질향상 등에 대한 지원도 실시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든지 수출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서면 등으로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한편 산업자원부 무역진흥과 윤범식 사무관은 수출지원센터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선, 4월말까지 대책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지난해 수출지원센터는 관대한 지정기준으로 매출액이 미미하거나 수출의 지도 없는 중소기업이 지정 받은 사례가 나타났으며, 중기청 관련 예산부족으로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전담인력배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했다. 경기 회복에 따른 우수인력의 재취업으로 퇴직인력활용 지원사업에 우수인력 확보가 어렵기도 했으며, 파견기관들의 구조조정으로 지원센터 인력파견에 소극적이기도 했다. 특히 지원센터 파견인력들이 전결권이 없어 수출지원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단순상담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 중소기업청, 정보화 지원단 추진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은 정보화 전문가 500여명으로 이뤄진 '정보화지원단'을 구성하고 정보화 지원희망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화 현장애로기술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화 지원희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보화지원단의 전문가를 20일 이내 기간동안 현장 투입해 정보화 추진에 대한 기술자문과 현장애로를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최고 80%까지 3천만원 한도에서 무상 지원된다. 정보화 마인드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보화 마인드 향상, 교육과 함께 인터넷 활용 및 PC관련 기술지원, 홈페이지 제작 등 정보화관련 각종 애로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또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수작업 업무를 디지털 환경의 정보화 기반업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선진 신 경영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키로 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전자상거래 쇼핑물 구축 및 활용에 따른 하드웨어 구입과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중기청은 정보화지원단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 개시를 위한 정보화지원단 발대식은 오는 5월초 개최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해외투자 박차

중소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대기업을 넘어섰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 2월까지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1억9,400만달러, 투자건수는 1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500만달러, 75건에 비해 각각 246.4%, 81.3% 증가했다.

반면 대기업의 해외투자는 1억7,700만달러, 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각각 46.2%, 7.7%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투자금액은 대기업보다 9.6% 많았다. 지난해말 대기업의 해외투자금액은 35억9천만달러로 중소기업의 6억9천만달러보다 5배가량 많았다.

우리 기업들의 2월까지 해외직접투자액은 총 4억2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억9,500만달러보다 1.8%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러나 투자건수는 136건에서 236건으로 73.5% 늘어났다.

이같은 추세는 소액위주의 투자건수가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과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부채비율 축소 등 구조조정에 나서느라 투자여력이 없는 상태"라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은 해외진출을 위한 생산 및 판매망 구축을 위해 활발한 투자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억2,600만달러로 55.9% 증가했고 건설업은 128.6% 늘어난 1,6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업은 4.3% 줄어들어 4,5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83.3% 증가한 2억7,500만달러로 전체의 68.4%를 차지했으나 북미는 8,900만달러로 9.2% 유럽은 2,200만달러로 69.4%, 중남미는 1,400만달러로 17.6% 줄었다.

# 전력분야 산업정보화 사업 발표회 열려

'99년도에 실시된 전력분야의 산업정보화 사업에 대한 발표회가 한전 별관 세미나실에서 한전과 정부, 한전정보네트웍(주) 등 관련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전력분야 CALS/EC 체계 구축 시범사업과 전력 EDI 전자서명 및 인증시스템 구축(한전정보네트웍), 전력수요 관리정보 DB 개발(전기연구소), 전력업계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지원 사업(하스 미디어) 등에 대한 설명이 실시됐다.

정부는 지난 2월, 2003년까지 전자상거래 선진국 진입을 위한 5대 중점시책과 40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력산업은 막대한 비용과 자재, 장기간의 공사기간이 소요돼 건설공기 단축 및 품질향상, 비용절감 등을 위한 신속한 정보 취득, 관련 기업간 정보공유 등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주관으로 전력산업 또한 경영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및 대국민 전기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정보화 경쟁력을 갖춘 전력분야 전자상거래(CALS/EC) 도입을 추진해 왔다.

'96년 통상산업부 전력분야 CALS/EC 체계 시범 구축사업으로 지정돼 지난 '97년 수립된 전력산업 CALS/EC 구축 기본 계획에 따라 지난해 전력 CALS/EC 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까지 1단계로 전자거래 정보기반 구축에 주력하고 2002년까지는 전자거래 표준화 및 정보공유체계를 확보하며 3단계로 2003년부터는 전자거래의 분야별 통합과 산업별 연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수출전선에 '환경비상'

환경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면서 우리의 수출주력산업인 전기·전자 분야의 수출에 「환경비상」이 걸렸다.

각국의 수입규제 못지 않게 환경규제 조치가 우리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환경규제에 가장 발빗고 나선 지역은 유럽연합(EU)이다. 그렇지만 미국과 호주 등 선진국이 점차 환경규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어 수출우선정책을 펴고 있는 우리로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EU는 최근 전기·전자제품의 내외부 포장재에 이어 제품 폐기물도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수거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우리 업체들은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기술개발

등으로 수출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EU가 우리제품에 대해 환경규제를 취하고 있거나 추진중인 품목의 EU 수출규모는 '99년 기준 전체 EU 수출액 202억달러의 약 72%인 145억달러, 특히 EU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전자분야의 환경규제가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상당한 수출환경 악화가 우려된다.

EU가 마련중인 전기·전자기기 환경규제는 전력소비량, 폐기전 처리, 전자파 규제가 기본 골격이다.

전자파의 경우 이미 60개 전자제품의 전자파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이동전화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업계 자율협정형식으로 TV, VCR, 수신디코더, 이동전화 충전기, 오디오 등 5개 가전에 대한 에너지소비량 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냉장고는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이 배터리와 축전지는 수은함유가 금지되며 PC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에는 미국의 강제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스타 로고(Energy Star Logo)가 올해중 도입될 전망이다.

전자사업진흥회는 「가격경쟁력으로 수출시장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업계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정부와 업계간의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무역위원회, 산업피해방지 최일선, 반덤핑상담지원실 새로 설립

WTO 체제의 출범과 OECD 가입을 계기로 우리 경제는 무역자유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역자유화율은 이미 99.9%, 거의 전품목에 대해 수입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농·축·수산업종의 경우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무역·유통, 금융, 통신, 건설 등 서비스시장도 개방폭이 늘어나면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내시장은 빠른 속도로 개방되고 있지만 그동안 산업보호를 위해 마련했던 장치들은 하나둘씩 폐지해야 하는 실정이다.

금융·조세지원 등 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국제적인 감시가 증대되고 있고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시행했던 수입선다변화제도 등 수입관리 시책도 폐지됐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산업피해구제제도다.

산업피해구제제도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수입된 물품에 적절한 제한을 가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로 국제적으로도 용인된 수입제한 제도다.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수입품의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산업피해구제제도는 불공정한 수입증가 유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제도와 상계관세제도, 긴급수입

제한제도로 구분된다.

덤핑방지관세제도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 성장을 지연시킬 때 관세를 추가 부과해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다.

상계관세제도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돼 국내산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제도다.

긴급수입제한제도는 수출국의 공정한 수출행위에 의한 수입이지만 수입량이 폭증해 국내산업이 심각하게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서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전담하고 있다. 미국의 ITC(국제무역위원회), EU는 EU집행위원회, 캐나다 CITT(국제무역심판소) 등 세계 주요국가는 전담구제기관을 신설·확충하는 등 산업피해구제제도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장점은 신고절차가 간편하고 조사 및 대응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된다는데 있다. 무역위원회는 무역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법원의 소송과는 달리 신고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신고서류작성이 가능한 잇점이 있다. 이와함께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제출자가 원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비공개 처리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의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구제조치는 당사자간에 한정해서 영향을 미치는 재판과는 달리 해당품목 취급자 전체에 대해 효과가 있어 단 한번의 판정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구제조치가 발동될 경우 국산제품과 수입품간의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된다. 조치대상물품을 수출해온 업체는 더 이상 불공정한 방법으로 국내에 수출할 수 없게돼 국내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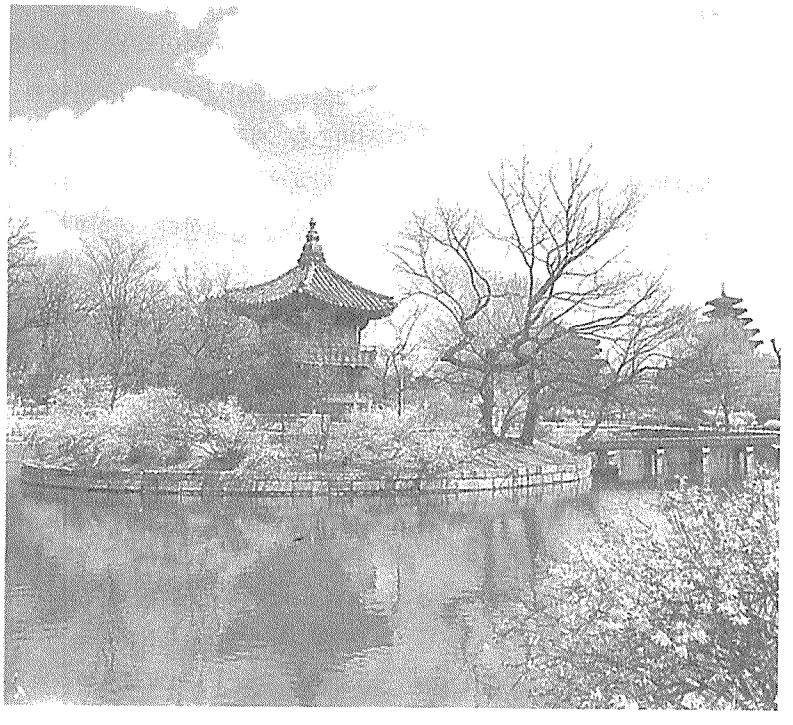
무역위원회는 지난 '87년 산업자원부에 설치됐으며 비상근 위원장과 위원 7명, 4개 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특정한 물품의 수입증가, 무역·유통서비스의 공급증가,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구제 등을 조사하고 판정한다.

4월 현재 총 78건의 국내산업피해구제 신청을 접수받아 그중 52건을 구제조치했고 8건은 피해부정판정을 내렸다. 신청인이 신청을 포기한 건수는 15건이며 현재 조사하고 있는 사안은 3건이다.

무역위원회는 주 업무인 산업피해구제제도 이외에 지난 2월부터 외국으로부터 반덤핑조사를 받는 우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반덤핑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13년간 축적한 반덤핑조사기법과 제도운영 경험을 살려 중소기업이 대응미숙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상담지원실은 조사단계별 쟁점사안에 대한 상담·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실은 조사개시 및 답변서 작성단계에서 조사개시 내용을 분석하고 답변서 작성요령을 안내한다. 예비판정 단계에서는 예비판정 및 잠정조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청회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최종판정이 나오면 최종판정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한 후 WTO 패널제소를 검토한다.

또 위원회는 수출입질서를 저해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위배한 물품의 수출입행위,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외 반출입 등 불공정수출입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제재하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행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으로 분류되는 대상은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건,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영업비밀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무역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시정조치명령, 사법기관에 고발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원산지 허위표시, 변경, 미표시,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 원산지를 혼동하거나 오인할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제재대상이 된다. 또 국내수출업자가 계약과는 다른 물품을 수출하거나 고의적으로 분쟁을 야기시켜 대외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한다.